

대화모임

대선 정국, 한국 기독교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5시 30분

대화의 집

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35



www.youtube.com/giyunsil

기윤실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



문의

크리스찬아카데미 최고권 연구원 010-5525-511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윤신일 간사 010-8630-1610

발제

배덕만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김선욱 교수 송실대학교

논찬

장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김성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화사회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크리스찬아카데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알리는 말씀

- 마이크를 이용하실 때, 개인 마스크 혹은 마이크 커버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주시요.
- 발언을 하실 때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면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모임 후 저녁식사를 마련하지 않았음을 양해 바랍니다.
- 휴식시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순서 및 목차

여는 순서 - 양 단체 대표 인사말 (14:00~14:10)

발제1 : 대통령 선거와 한국 개신교 (14:10~14:35)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발제2 : 대선 정국과 한국의 교회들 (14:35~15:00)

김선욱 송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논찬1 (15:00~15:15)

장동민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논찬2 (15:15~15:30)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휴식 (15:30~15:45)

전체토론 (15:45~17:00)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사회자, 발제자) (17:00~17:25)

대통령 선거와 한국 개신교: 그 역사와 성찰

배덕만(기독교연구원 노헤미야, 교회사)

I. 글을 시작하며

한국의 대통령들만큼 위험하고 불행한 정치인들도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써내려간 역사처럼, 우울한 비극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종신대통령을 꿈꾸었던 초대 대통령은 시민혁명으로 불명예 퇴진하여 망명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또다시 영구집권을 추구했던 박정희는 아끼던 수하의 총탄에 쓰러졌다. 뒤를 이은 두 명의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퇴임 후 나란히 감옥에 갔다. 노무현은 퇴임 후 검찰의 강압수사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도 현재 복역 중이다. 이런 비극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진투구마저 불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탄생과 함께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서, 남한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개신교도 그 혼돈의 역사와 영욕을 함께 했다. 분단과 냉전, 혁명과 유신,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증법적 진화 속에서 이 땅의 개신교인들은 생존과 지배, 이념과 복음, 국민과 신자 사이에서 힘겨운 진자운동을 반복했다. 때로는, 대선을 통해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대선에서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을 무한반복하면서 말이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 현대사와 교회사 모두를 관통하는 대통령선거와 한국개신교의 상관관계를 연대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대선들을 통과하면서, 개신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반성과 제안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고민하는 개신교인들에게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진행된 대선에서 개신교의 역할과 반응을 시대 순으로 살펴본 후, 다양한 시대에 대선을 경험한 이들이 한국 개신교회를 향해 제시한 반성, 비판, 제안 등을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국개신교를 향한 나의 생각을 결론으로 제시할 것이다. 부디, 이 글이 한국에서 ‘정치와 종교’라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개신교가 보다 현명하게 풀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II. 역사

1. 1948년-1960년

대통령 선거와 개신교의 인연은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와 함께 시작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7월 20일)했기 때문에, 개신교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대응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의장 이승만은 국회 개회식에서 종로 갑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에게 개회기도를 요청했고, 정부수립일(8월 15일)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선거를 기도로 대신했다. 이때부터, 제1공화국의 국가의전은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변화된 현실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홍수의 평가처럼, 이런 이승만의 행보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회가 그를 지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승만에게 치명적이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기사화생했다. 결국, 전쟁기간 동안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개신교는 1952년 대통령선거를 “기독교 대 반 기독교의 엄숙한 결전”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정치 자체를 기독교인이 장악하여 기독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²⁾ 이런 의식 속에서, 개신교는 이승만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대표적인 개신교 신문 「기독교공보」는 7월 4일자 ‘사설’에서 “우리 대통령은 독재가 아니요 신앙자이다. 매일 아침 5시에 예배드리고 감옥전도제도, 종군전도제, 국기주목례를 제정하여 전도의 길을 열어준 신앙자다. 우리 대통령은 한 가지 일에만 독재자다. 공산당 토벌은 독재자라고 말한 것은 적당한 설명이다”고 이승만을 옹호하였다. 한국기독교연합회(회장 전필순)는 7월 26일 주요 교단들로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만장일치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조직(도위원회, 군위원회, 교회위원회)을 구성하고, 선거 전날인 8월 3일 주일에 전국 교회가 이승만의 당선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다. 최종고의 평가처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정치와 종교가 상호한계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교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1956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만은 종신독재를 꿈꾸며 다시 한 번 헌법을 개정했다. 결국,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1954년 11월 27일 통과되었다. 소위, “4사5입개헌”이다. 이승만의 무리수는 결국 안팎에서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했다. 이승만 반대세력이 결집하여 1955년 9월에 민주당이 창당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1956년 5월 15일 치러진 정·부통령선거에서 개신교는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독교공보」는 “입후보자들 가운데 혹은 선거운동자들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헌법상의 정교분리에 근거해서 ‘교회가 정치단체가 아니라’는 한계를 밝혀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으로 추천한 ‘정부통령선거추진기독교중앙위원회’(위원장 전필순, 사무장 김종대)는 이 위원회가 개인 자격으로 만든 단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을 검

1) 김홍수, “한국 기독교의 현실정치 참여의 유형과 역사,” 「신학사상」 제78집 (1992 가을), 614.

2) 임희국, “제1공화국시대(1948-1960) 장로교회의 정치참여, 이와 관련된 한경직 목사의 설교,” 「장신논단」 Vol. 44 No. 2 (2012. 7), 22

토하면서, 김홍수는 “이 시기에 형성된 목회자의 정계진출에 대한 거부감과 교회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계 여론은 그후 교회 또는 교회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운동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했다.³⁾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결국, 이승만 독재가 4.19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이미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한계를 감지한 개신교인들이 지난 대선부터 이승만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개신교 인사들도 존재했다. 개신교인이 주축이 된 ‘자유당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는 2월 19일 「기독교공보」에 “대통령에 리승만 박사로 부통령에 리기봉선생을”이란 광고를 실었다. “교회의 발전과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부통령선거에서 “기독교정신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과 이기봉을 추천한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정치의 종교 이용 관습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행태였다. 반면, 제1공화국을 붕괴시킨 4.19혁명은 정교유착의 탓에 걸려 있던 개신교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 1년 후에 발표된 글에서 김재준은 4.19를 통한 개신교의 각성을 보여주었다.

4.19 혁명은 암운을 뚫고 터진 눈부신 섬광이었다. 그 윤리적 높은 행위가 일반의 양심의 자화상을 소출시켰다. 교회도 이 섬광에서 갑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다...국가를 절대화하려는 독재경향이 억어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에 교회로서의 경고를 제대로 발언하지 못했다는 것, 교회가 텅텅이 집권자의 일치 의식에 자위소를 설치했다는 것, 교회가 대 건설사업에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 원칙적으로 반성될 수 있을 것이다.⁴⁾

2. 1961년-1980년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정변으로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이로써 4.19혁명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던 민주화와 통일의 열망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하지만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과 냉전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도 대체로 5.16 군사정변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마저 “5.16 군사혁명은 조국을 공산침략에서 구출하고 부정과 부패로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말이다. 비록, 박정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했음에도, 이후 개신교와 제3공화국은 반공을 매개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했다.

1969년, 박정희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3선 연임을 허용하도록 개헌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은 양분되었다. 먼저, 김재준, 박형규, 함석헌 등이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러자 김윤찬, 박형룡, 조용기, 김준곤, 김장환 등 보수적 목회자 242명이 ‘개헌문제와 양심자유선언’을 발표하여 진보진영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날마다 그 날의 수반인 대통령과 영도자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 ‘대한기독교연합회’(DCC)는 ‘개헌에 대한 우리의 소신’을 발표하여 삼선

3) 김홍수, “한국 기독교의 현실정치 참여의 유형과 역사,” 620.

4) 김재준, “4.19이후의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961년 5월호), 43.

개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기 시작했다.⁵⁾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박정희는 부정선거와 국회에서 변칙통과를 통해 개헌에 성공했다.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또 다시 출마했다. 그러자 ‘3선 개헌’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던 각계각층의 민주화 인사들이 1971년을 ‘민주수호의 해’로 정했다. 1967년 6.8총선에서 극심한 부정선거를 경험했기에,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통해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지식인 원로들과 4.19 및 6.3 세대 청년, 학생들, 기독교계”가 모여 4월 19일에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조직했다. 4월 20일에는 기독교 학생단체 대표들이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두 단체는 ‘민주수호청년협의회’ 및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과 함께 선거 당일에 6,319명의 선거참관인단을 전국으로 파견하여 선거를 감시했다. “이제 교회는 교회청년들과 소장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면서 선거참관에 나섰다.”⁶⁾

박정희의 죽음(1979. 10. 26), 서울의 봄(1979. 10. 26-1980. 5. 17), 광주민주화운동(1980. 5. 18-27)을 거치면서 전두환이 주축이 된 신군부가 등장했다. 1961년 4.19혁명이 5.16군사정변으로 이어졌던 불행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전두환은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어 정권을 장악했다. 비록, 형식적으로 최규하가 여전히 제10대 대통령으로 존 재했지만, 실권은 전두환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의장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경 목사는 “어려운 시기 막중한 직책을 맡아 사회 구석구석까지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8월 16일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간접선거를 통해 스스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9월 30일, 개신교는 ‘전두환 대통령 당선 축하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개신교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입법부, 사법부, 정치인 등 1,344명이 참석했다.⁷⁾ 이처럼, “한국교회의 정교유착은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현되었다.”⁸⁾

3. 1987년-2002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했다. 건국 이후, 최초의 민주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불교), 김영삼(개신교), 김대중(천주교)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들의 종교도 모두 달라서, “빅3 종교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⁹⁾ 특히, 이번 대선에서 노태

5) 조성수, “한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회사적 측면에서 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97-98.

6) 김흥수, “한국 기독교의 현실정치 참여의 유형과 역사,” 624.

7)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4), 115-16.

8) 전명수, “한국 종교와 정치의 관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담론 201』 16(2) (2013), 81.

9)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45.

우가 당선되었지만, 개신교 진영에선 장로라는 이유로 김영삼을 적극 지지했고, 김영삼도 개신교에 많은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28개 교단과 서울 지역 2,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김영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부산·인천·대전 등지에서도 2,000여명의 목회자들이 김영삼을 지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목사 417명도 김영삼 지지를 선언했다. 김영삼도 이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유세를 다니는 곳마다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도회에 참여했다.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김영삼의 개신교 행보를 추려보면, ‘개신교 20여 개 교단 대표인 총회장과 총무 등 오찬 모임,’ ‘부산 지역 교계 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 ‘충청지역 교회 지도자회 주최 김영삼 장로 환영 조찬 기도회,’ ‘28개 교단 목사와 장로 2000여 명 서울지역 교계지도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은 모임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한 조찬 모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출신의 김영삼 둘째 딸이 나와 특별 찬송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등 김영삼은 대선 기간 내내 개신교 정체성을 부각시켰다.¹⁰⁾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는 김영삼(민자당)과 김대중(민주당)의 양자대결로 압축되었다. 선거 직전에 월간 「목회와 신학」이 서울경기 지역의 평신도 8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후보지지 기준으로 국가경영능력(38.3%), 도덕성(14.1%), 민주화 기여도(12.8%)를 꼽았다. 반면, 기독교인을 지지기준으로 삼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1%에 불과했다.¹¹⁾ 하지만 30여 년 만에 개신교 대통령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개신교는 총현교회 장로인 김영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개신교 ‘장로대통령을 만들자’라는 구호는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¹²⁾ 특히, 김차생 장로의 ‘나라사랑협의회’(나사협)의 활동이 중요했다. 1987년에 조직된 나사협은 전국 170여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선거 기간 중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김영삼을 위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개신교 목사들, 대형교회, 그리고 한기총이 김영삼의 일등공신들이었다.¹³⁾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한 김대중이 이회창(한나라당)과 이인제(국민신당)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장면 내각이 실각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이 36년 만에 집권한 최초의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¹⁴⁾ 하지만 오랫동안 좌파 정치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개신교계는 김대중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하지만 이인제의 경선 불복으로 여권의 표가 분열되고, 김종필의 자민련이 협력하여 예상과 달리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개신교로서는 불만족스런 결과였다. 게다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중파 방송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다루었고,

10)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48.

11) 전명수, 한국 종교와 정치의 관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88.

12)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66.

13)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66-68. 대형교회와 한기총의 지원이 김영삼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그동안 개신교의 교세가 크게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세 면에서 보자면, 자체 추산 개신교인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1960년-70년대 300만 명, 1977년 500만 명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세였다. 교회 수 역시 늘었다. 1950년 3,114개였던 교회는 1990년대 들어 10배 이상 성장한 35,189개로 조사되었다.” 169.

14)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제15대_대통령_선거.

NCKK 계열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김대중 내각에 진출했다. 게다가, 햇볕정책까지 추진했다. “이때부터 보수 개신교는 김대중 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¹⁵⁾ 2002년 노무현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노무현이 사학법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자, 보수 개신교가 강력히 반발했다. 한기총과 뉴라이트가 중심이 된 반정부 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조갑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언론도 개신교를 자극하고 힘을 보탤다.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 임기 말까지 18차례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¹⁶⁾ 보수 개신교인들에게 이 시기는 단지 “잃어버린 10년”일 뿐이었다.

4. 2007년-2012년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이 역대 최다득표로 당선된 선거였으며, 개신교의 정치적 역량이 총동원된 선거였다. 김명배의 주장처럼,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심판하는 선거였다.”¹⁷⁾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도덕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특히,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이 출마하자, 개신교는 “장로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다. 한기총, 뉴라이트, 대형교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선거판을 장악했다. 예를 들어,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6일, ‘북한 인권과 자유평화를 위한 국내외 70인 목회자회’와 ‘한기총,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교회에 모여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지지 분위기를 표출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한국미래포럼’(총재 김홍도 목사)은 발족식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자 이명박 후보의 30년 지기인 김진홍 목사는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이명박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2007년 11월 소속회원 17만 명의 이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도 그런 도움의 한 예다.¹⁸⁾ 그 외에도, 김홍도, 전광훈, 오정현, 이수영, 이철신 같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했다.

이명박 자신도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먼저, 그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는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50회가 넘는 개신교 행사에 참여하여, “축사 외에 강의, 발제, 간증, 기도, 봉헌사, 마라톤 참가 심지어 성경 봉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계에 얼굴을 비쳤다. 가장 유명한 예는 2004년 5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 주최한 ‘청년학생연합 기도회’에서 “서울의

15)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97.

16)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198-99.

17) 김명배, “2000년대 대선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2013. 12), 48.

18) 배덕만, 『복음주의 리포트』 (대전: 대장간, 2020), 359.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교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낭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와 개신교 행사에 참석하여 “나는 서울시장이기 이전에 교회 장로”라고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하게 표출하여, “간증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겉으로는 신앙 체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정치 유세에 가까웠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는 리더십』(이채운 지음, 청어람, 2007)이란 자신의 간증집을 출판하기도 했다.¹⁹⁾ 끝으로, 8월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명박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한기총을 방문했다. 공식 환영식 후 진행된 바공개 면담에서, 이명박은 “본선이 경선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기독교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²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개신교인들이 이명박을 맹목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먼저, 에큐메니컬 진영은 선거감시운동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9일 ‘2007 기독교대선연대’(공동대표 이근복 목사 외 3인)을 발족시켰다. 발족식에서 보수 교계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 편들기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윤실,’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KSCF’ 등 에큐메니컬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연합한 ‘기독교사회포럼’도 발족되어,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진로를 모색했다.²¹⁾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되었다. 경제침체 속에 힘겨워 하던 국민들이 후보의 도덕성 보다 경제회복을 선택했고, 개신교인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김명배의 표현처럼, “한국교회는 2007년 대선의 화두인 경제와 관련하여 ‘경제를 mammon으로 보느냐, 예수의 관점으로 보느냐’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mammon을 선택하였다.”²²⁾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종교와 관련해서, 불교계가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개신교 진영은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물론, 한기총은 ‘신천지 관련설’과 ‘1억짜리 굿 사건’ 등으로 곤경에 처한 박근혜 후보를 적극 변호하면서 그녀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특히,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牧사는 9월 10일 박근혜 후보에게 “여기에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300만 표”라고 말하며 지지를 약속했고,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도 ‘종북좌파 척결’을 목표로 박 후보를 지지했다. 김홍도 목사도 12월 16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간접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개신교 보수진영이 만든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공동대표회장 이용규 정성진 목사, 전용태 장로)는 2012년 대선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대신, 기독교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기도회와 설명회 등에 집중했다.²³⁾ 한편, 중도 진영의 ‘복음주의 기독교연대’(공동대표 강경민, 백종국, 이문식)와 진보진영의 ‘2012 생명평화기독교행동’ 목회자들은 2012년 대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19) 김지방, 『정치교회』 (서울: 교양인, 2007), 240-48.

20) 백중현, 『대통령과 종교』, 244.

21) 김명배, “2000년대 대선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49.

22) 김명배, “2000년대 대선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49.

23) 김명배, “2000년대 대선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51.

III. 성찰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개신교도 위험한 도박을 반복했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으나, 때로는 이념과 신념에 따라 위험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 틀을 갖추었고, 이 땅의 개신교도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개신교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대통령선거와 개신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주문을 살펴보자.

1. 기존의 정치참여 방식을 재고하라

해방 이후 개신교와 선거의 관계를 분석한 김홍수는 그동안 개신교가 선거에 참여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랫동안 당연시했던 특정 후보를 지지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것, 성직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했던 것, 그리고 기독교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 과연 정치적·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비판적으로 구습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의 관찰에 근거해 볼 때, 교회의 기존 정치참여 방식, 즉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성직자의 직접적인 정치활동, 기독교정당 조직 등은 모두 다 신중한 검토와 재고를 요구하는 것들로 보인다. 이 방식들은 아직까지는 기독교인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기 보다는 더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2. 선거에 적극 참여하라

일제의 억압과 해방 후의 경직된 사회에서,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정치참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제 독재도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를 마음껏 실험할 기회가 도래했다. 하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 적극적·책임적인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진우는 이제야 말로 한국의 개신교회가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만약 개신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결국 교회가 정치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면 그만큼 현실 정치의 부패와 부정은 온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교회가 부패한 정치권의 한 지형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한국 사회의 올바른 변화 발전에 역행하는 낡은 세력에 동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교회가 바른 입장을 갖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정치 형성과 사회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²⁵⁾

24) 김홍수, “한국 기독교의 현실정치 참여의 유형과 역사,” 628.

25) 정진우, “16대 대선,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2002, 12), 52.

3.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라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특히, 양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하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개신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유착하거나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교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하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 특히 개신교가 수행해야 할 일차적인 사명임에 틀림없다. 노길명은 종교가 이익집단의 범주를 벗어나 보편적 진리를 전파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반복해서 주장한다.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종교의 사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종교집단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이나 조종은 정당성이 약하거나 부패한 권력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입장이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도덕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²⁶⁾ (21)

4.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라

한국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분열하는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모든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바퀴를 통해 운영된다. 양자의 조화와 균형 없이, 건전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간격이 넓고 깊다. 김호기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개신교의 책임을 요청한다. 역사적 경험이나 현재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가장 적합한 존재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분열의 원인과 갈등의 촉매로 기능하지 말고, 이제야말로 개신교가 화해와 상생의 중재자로 활약할 때다.

우리 사회에서 대선은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보수 세력은 산업화를 일궈냈다는 자긍심이 강한 반면, 진보세력은 그 산업화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억압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두 세력이 서로의 존재를 잘 승인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사회통합을 일궈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가 둘로 나뉘는 ‘두 국민 국가’가 강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이와 관련해 나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하고 싶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타자에 대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천이 제대로 발휘될 때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²⁷⁾

26) 노길명, “광복 이후 한국 종교의 정치의 관계: 해방공간부터 유신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27집 (2002. 6), 21.

27) 김호기, “2002-2007-2012 대선의 회고와 한국정치의 전망,” 『기독교사상』 (2013. 12), 44-5.

5. 정치에 예수를 끌어들이지 말라

지난 세월, 개신교는 자신의 신앙과 정치를 긴밀하게 연결지으려고 분투했다. 신정정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모든 대선에서 기독교인 후보에게 특별한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기준과 선택은 민주주의 발전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지에 근거한 배타성이 맹목적인 종파주의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임동진은 정교분리를 충실히 고수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현실에서 어느 후보가 ‘우리과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를 밀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봉당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 출신의 후보를 밀어 주려고 하더라도 이를 ‘지역당’이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장로들이 모여 어느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운동에 나섰다는 잡지도 눈에 보인다... 과연 종교와 정치는 어떤 계파적인 연계를 맺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 가이사가 알아서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면서 한편 그 이전에 한 사람의 보통의 국민에 다름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정치에까지도 예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여 중세 암흑기의 교회 시절로 돌아가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²⁸⁾

6. 하늘의 뜻을 묻지 말라

지난 대선들에 참여하면서 개신교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과 성경으로 정당화했다. 대개의 경우, 그런 정당화는 하나님이나 성경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단지, 개인적 사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성경을 도용했을 뿐이다. 그런 전략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차라리, 이제는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적 색채를 강조할수록 공신력은 역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조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뼈있는 통찰이다.

하늘의 뜻을 내가 얻었다는 따위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기독교인이 버려야 할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다. 이번 선거에서 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기도 역시 필요가 없다.... 하늘의 뜻을 물으려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과 사람의 맘을 읽으려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회를 이끈다는 목회자들의 교회연고주의나 신앙혈연주의를 내세워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를 주장하는 설교와 기도는 참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다. 예. 장로대통령만들기 따위.”²⁹⁾ (14)

28) 임동진, “대통령 선거와 기독교인,” 『기독교사상』 (1992. 12), 149.

29) 김조년, “연말 대선과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13-4.

7. 신자유주의 정권을 교체하라

2007년 대선은 “경제”가 화두였다. 비민주적 유신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전개해 왔던 진보정권은 IMF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쓰나미와 10년간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국가부도사태에서 신음하던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수구 세력의 집요하고 전방위적 반격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시대적 당위로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이런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무의미해졌다. 결국,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손석춘은 진보진영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권교체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정권교체여야 한다. 좌파정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을 교체할 때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신자유주의정권 10년을 교체해야 마땅하다...물론, 이명박이나 이회창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임을 대선 공간에서 최대한 알려나가야 한다. 반신자유주의의 가치연대가 필요한 까닭이다. 여기서 가치연대는 자신의 경제주권을 찾으려는 유권자들의 세력화를 뜻한다...과연 진보세력은 48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믿음을 주고 있는가. 언제나 통일을 강조하지만, 통일 뒤 남과 북의 7200만 민중을 먹여 살릴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그렇다. 분단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면 진보세력이 정책 능력을 높여야 한다.³⁰⁾ 28.

8. 새로운 역사참여 신학을 정립하라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물질적 가치가 정서적 가치를 압도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는 성경적 가치를 탐구하며 시대적 풍조에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이런 풍조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일에 앞장섰다. 김명배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선 새로운 신학, 특히 “새로운 역사참여 신학”을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들어와 세 번의 대선을 거치는 동안 한국교회는 기득권층, 보수세력과 친화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 친화적 관계 속에서 교회의 성장을 도모했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배를 불리는 기업들처럼, 대형교회들은 문어발식으로 지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기업대물림처럼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세습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에 기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한국교회에 역사와 사회참여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민중신학, 토착화 신학 등 한국적 신학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2000년대에 맞는 새로운 역사참여 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³¹⁾

30) 손석춘, “2007 대선이 준 한국정치의 숙제-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기독교사상』 (2007. 12), 26-8.

31) 김명배, “2000년대 대선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50-1.

IV.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대통령선거의 역사를 간략히 살피면서, 각 선거에서 개신교가 참여·대응했던 방식도 함께 검토했다. 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개신교가 숙고해야 할 과제들을 여러 사람들의 글을 통해 소개했다. 이제, 이런 역사와 제언을 토대로 이번 대선을 앞둔 개신교인들을 향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선을 통해, 개신교는 특정 이념 및 정당과 자신을 배타적으로 동일시해왔던 오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분단과 냉전을 배경으로 남한에서 재구성된 개신교는 ‘반공, 친미, 친자본’의 전위대로 맹활약을 해왔다. 덕분에, 우파정부가 부여한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우파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런 특권적 지위를 획득·유지하기 위해, 개신교는 복음을 타협하고 예언자적 책임도 회피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황금기는 막을 내렸다. 따라서 특혜와 특권을 부여했던 특정 정권 및 이념과의 밀월관계도 청산하고 철저하게 “백의종군”해야 한다.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착오적 극우세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둘째, 당분간 광장에서 합성을 멈추고, 골방에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분명히, 개신교가 한국의 문화를 선도하고,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던 때가 있었다. 수와 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은 비범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개신교는 몸집이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힘도 막강해졌다.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법안을 폐기시킬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전성기가 막을 내리자, 광장에 모여 폭언과 망언의 말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장에 빈번히 다수가 모여 막말을 쏟아낼수록, 사회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혐오감은 급상승했다. 동시에, 개신교 내부의 모순과 오류가 만인의 상식이 되면서 어느새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분명히, 개신교가 담대히 광장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광아와 골방으로 물러날 때가 아닐까? 분명히 세상이 듣도록 합성을 외쳐야 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침묵하며 자신을 성찰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말이다.

셋째, 이익집단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공적 종교로 성숙해야 한다. 그동안 대선에서 개신교가 보여준 모습은 과거에 향유하던 특권을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치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대선의 존재 이유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개신교는 자신이 또 하나의 이익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기적 욕망으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보편적 가치와 공적 진리를 전파하여 상생과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고등종교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그런 숭고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종교는 단지 미신과 사이비일 뿐이다. 따라서 개신교가 이기적 욕망에 집착하여, 보편적·공적 가치를 외면할수록 한국사회에서의 입지는 빠르게 축소될 것이다. 반면, 타자를 존중하고 공동체적 이상에 충실할수록,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수록, 한국사회는 개신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이번 대선이 개신교에게 성숙과 변화의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선 정국과 한국의 교회들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1. 우리는 왜 이 주제를 다루는가

대선 정국이 다가왔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에서 각각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고, 내년 3월에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런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부를 막론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

필자가 학자로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관해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은 2002년 3월 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3·1절을 기념하여 벌어진 구국기도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제목과 행태로 집회를 했다. 폭압적인 권위주의 시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입장에서, 더욱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모진 어려움을 감내하였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았던 나로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던 시점에 이루어진 그런 식의 구국기도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우리 중심의 활동을 해왔던 기윤실에 2000년대 초반 ‘삶의 정치윤리 운동본부’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그 본부장으로서 활동을 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대선이나 총선 사국이면 어김없이 기독교 관련 잡지나 신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선거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에 대해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강연 기회도 가졌다. 하지만 철마다 그런 메시지를 요구한 청탁자의 간절한 입장이나 필자의 절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고, 또다시 그런 철이 되어 오늘과 같이 그 주제로 글을 쓰고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987년을 기점으로 시민운동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분화되지 않았던 그 이전과는 달리, 1987년 이후로는 시민운동이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민주주의도 그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권위주의 정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에 교회는 그 권위주의와 싸워 정치의 길에 기독교적 정신을 세워보려고 애썼던 편과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경제발전에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속적 영향력을 키웠던 편으로 나뉘었다. 이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은 교회들이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세속적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편과 무엇이 올바른 기독교적 영향력을 정치 영

역에 끼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편으로 나뉘어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철에 어떤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를 예시하고 바람직한 투표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진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 시점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정치와 연관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려고 한다. 우선 필자는 정치의 특성을 기독교가 갖는 특성과 비교 설명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 보려 한다. 뒤이어 우리가 정치와 연관해서는 ‘한국교회’라는 단수 명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들이 반성적 태도로 추구해야 할 바를 몇 가지 열거해보고자 한다.

2. 정치의 특성과 기독교의 특성

정치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방식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필자가 가장 익숙해 있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에 대한 주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한다. 소위 현상학적 방식으로 접근하여 얻은 성과로 그가 파악한 정치의 특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징들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두 특징을 비교해 보자.

첫째, 정치는 인간의 복수성(the human plurality)에 대한 인정을 기초로 한다. 정치는 인간 개개인이 서로 관점과 생각이 다른 개체임을 인정하고, 그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인간관으로 접근하여 차이를 무시할 때 폭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폭력이 없이 말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행동을 상호제약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인간관은 신 앞에 죄인으로서 모두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본질을 갖는다. 개체가 가지는 다양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보편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을 살피는 방식이 기독교적 사유의 중심에 있다. 신 앞에 신자들의 개별적인 의견의 다양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정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절대적 존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계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정치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인간적 현상이다. 인간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때 정치는 발생한다. 공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이 모여 공동생활을 할 때 생긴다.

다수의 신들이 존재하는 곳을 그려본다면 거기에는 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신들 사이에 정치가 존재하려면 이 신들 사이에는 다름이 있어야 한다. 신들이 있으나 서로 다르지 않다면 그들 사이에는 갈등도 또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결도 있을 필요가 없다. 사실, 다름이 없다면 ‘신들’이라는 표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냥 하나의 신이 범신론적 존재로 있을 뿐일 터이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 “다수의 신들이 존재하는 곳을 그려본다면 거기에는 정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가 질문으로 성립할 수

있으려면 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곳을 상상해야 한다.

절대적 신이라면 ‘전지, 전능, 무소부재’라는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신이 절대적 존재라는 말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신이라면 복수로 존재할 수 없으며, 또 복수로 존재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신들은 인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이런 존재들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갖는 존재로 설명된다. 삼위일체로 설명되는 신의 세 위격인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사이에는 정치가 존재할까? 이 세 위격들 사이에는 다름의 없지는 않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이므로, 다름과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행위가 이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기독교에서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삼위 사이는 정치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다.

둘째, 정치는 의견의 영역이며,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진리의 영역이다. 정치는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을 통해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삶의 다양성과 의견 차이에 있다. 정치란,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 공간에 모여 정치적 자유를 통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통과 조정의 과정 자체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며, 교회는 진리의 공간이어야 한다.

정치는 말, 즉 언어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폭력은 정치의 본령 밖에 있다. 다양성, 또는 복수성이 말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정치는 다른 사람과의 얽힘과 갈등을 시작한다. 문제가 정치적으로 남아 있으려면 그 해결도 언어에 머물러야 한다. 표현된 개성이 갈등을 일으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행위조정이 요청될 때,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공동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자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규정을 한 뒤, 곧이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규정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은 개성을 표출하고 의견을 드러내고, 또 공적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충돌하는 의견들을 언어를 통해 공적 공간에서 조정해 나간다.

인간의 복수성이 언어로 드러날 때 그것은 의견으로 표출된다. 의견 가운데 개성이 드러나고 고유한 관점이 드러난다. 의견은 설득을 목표로 한다. 설득은 나와는 다른 타자와의 의견의 일치와 합의를 목표로 한다. 복수의 인간이 정치적으로 된다는 것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준과 준거의 존재들을 설득이라는 방식으로 넘어서서 상대의 동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동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려는 모든 시도, 심지어 논리나 진리 주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시도 조차는 정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에 진리를 도입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 대표적 철학자가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철인은 지혜로운 자이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진리를 터득한 자이며, 이 진리를 국가 내에

펼쳐 모든 백성이 따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정의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각자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국가 내에 조화를 불러올 것이며, 소란을 그치게 하고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다.

국가 안에서 철학자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은 정신이 다른 신체의 부분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마치 정신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자도 그러한 절대권을 국가 내에서 가져야 한다. 철학자가 국가 내에서 정치가로서 해야 할 책무는 인간사의 영역에 기준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준거들은 절대적 진리에 기초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어야 참과 거짓의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옳은 것들을 사람에게 옳다고 믿게 하려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란 유한한 인간의 설명 능력이나 해명과 무관하게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진리 개념을 정치 영역으로 도입할 때 설득의 과정은 불필요하다. 듣는 사람이 진리를 접하고 깨달음을 얻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냥 따라야 한다.

이런 진리 주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철학의 정신은 기독교적 정치철학의 원형을 보는 듯하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폭력적이 될 수 있다. 진리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의견의 영역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폭력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만일 정치 영역이 공고하다면 거기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변질하여버릴 것이다. 주장된 진리가 하나의 의견의 형태로 변모하는 것이 정치 영역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 영역은 공론 영역(public sphere)이다. 정치적이란 말의 뿌리는 그리스어에 있지만, 공적이란 말의 뿌리는 라틴어에 있고 그 기원은 로마적이다. 공적(public)이라는 말은 인민을 의미하는 라틴어 *populus*의 파생어, ‘사람에게 속한’을 뜻하는 *publicus*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공적인 것이란 모든 사람과 연관된다는 의미에서 공(公) 혹은 공공성(公共性)을 의미한다.

기독교가 지배한 서양 중세 사회에서, 사회가 성(聖)과 속(俗)의 관계로 재편된 가운데 공적 사안은 교회의 권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성스러운 일과 공적인 일 이외의 활동들은 대부분 집안일처럼 여겨졌다. 사적 영역은 봉건제도의 확대로 크게 팽창했고, 이와 더불어 봉건 영주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가장의 독재적 권력과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됐다. 그의 통치는 사람에 따라 거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정치 공간에서 형성되는 정의와 법의 작용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가정에서의 인간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동료라는 의미의 *companis*는 ‘같은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데, 영어 단어 *company*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중세 봉건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공동선(the common good, 共同善)’이며 이는 공공선(the public good, 公共善)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이 공동선에는 정치적 의미가 없으며 단지 사적 개인들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그 개인들 중 한 사람이 공통의 이

익을 돌보는 한에서만 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소유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공통의 이익은 단지 사적인 이익의 연장선에서 이해된 것일 뿐 사적 이익들을 매개하는 공공성의 의미는 없었다.

정치 공간에서는 공동선(共同善)과 구별되는 공공선(公共善)의 추구가 가능하다. 공동선이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말한다. 공공선은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모두의 관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이익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문제다. 공공선은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기준을 넘어선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진리가 제시되긴 하지만 토론되지 않는다. 가치는 설교되지만 합의를 통해 새롭게 일구어가지는 않는다. 만일 주어진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데 익숙한 집단에게 남은 토론 거리는 공동의 이익의 형성이 된다. 기독교에게는 공동의 이익이 교세의 확장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정치는 시민이 판단을 통해 접근하는 영역이다. 정치가 진리의 영역이 아니고 의견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은 판단의 행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치 판단은 참과 거짓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소통 가능성(communicability)이 관건이 된다. 소통 가능성의 열쇠는 구체적인 대화에 있다.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실제의 대화가 중요하다.

소통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전제한다. 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설명이란 이론적 증명 즉 논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아렌트가 제시하는 설명은 삶의 경험과 말하는 이의 개성과 인격이 모두 드러나는, 일상적 대화의 형식을 의미한다. 그리스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 합의를 이루며 거기서 공동의 행위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반해 이론이란 이성의 작업으로서, 생생한 삶의 경험을 소멸시키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망각하게 한다.

개성과 개인의 관점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설명이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것이 정치적 대화이다. 대화 참여자는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을 기회를 얻는다. 대화에 참여하는 자세로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들으면 우리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태도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한다. 이런 자세에서 불편부당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나의 의견을 불편부당하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타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관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으려면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확장이 필요하다. 마음을 확장하면 생각이 확장된다. 이런 확장은 상상력의 작용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생각은 상상력과 반성 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만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관점, 그리고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중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의 생각은 주관성을 넘어서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사적 이해 관심에 몰입하면 불편부당한 의견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의식이 전적으로 투명하고 중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의식의 자연적 지향성은 상상력과 반성을 통하여 생각을 확장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태도는 공적 공간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극복할 것이 요구된다. 불편부당한 의견을 형성하려면 사적 이익 중심의 태도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칸트는 사적 이해(personal interest)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것이 확보되면 불편부당성이 확보되고, 또 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기독교는 이런 소통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가 형성됨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다.

3. 교회와 교회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그 성장의 과정과 나란히 부흥 신화를 이루어왔다. 부의 획득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하는 말씀과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 물론 그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도 충분히 제공되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투입되었던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부의 기획된 집중과 눈감아준 착취의 결과로 자본이 형성되고 재벌과 거대기업들이 일구어졌던 것도 알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올라간 땅값이 일부 사람의 호주머니로 집중해서 들어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덩달아 불로소득을 올렸으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런 이익 실현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조리에 대해 일부의 교회들은 무지하거나 눈을 감았고 다만 그렇게 부를 일군 자들에게 신의 축복이라는 명찰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일부의 교회들은 그때 소외되고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하였다.

1950년대부터 일부 기독교계가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운동의 씨앗은 주로 도시산업선교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였다. 이런 단체들은 처음에는 전도의 연장선 위에서 노동자들과 만났으나 70년대부터는 노동운동 자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노조결성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는 데 앞장섰다.

경제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의 삶과 그와 관련한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도 한국의 교회들은 서로 다른 길들을 걸어왔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전래되어 의료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기도 했고, 민중 계몽운동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항일 독립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교회들은 정치에 대해 무심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음을 현실적으로 자각하였다. 식민지하에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이고 종교적 의미로 충만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불복하고 저항을 선택하기도 했으나, 그에 굴복하고 친일과 부역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예배 시작을 황궁요배로 했던 것은 교단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과 신앙의 차원에

대한 분리가 강요되었는데, 이는 친일적 정치에 대한 동조를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고, 이는 또 신학적으로 내면화되었다. 해방 후 교회들은 매카시즘의 광풍과 더불어 반공의 정신을 교회 차원의 신학 속으로 내면화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책무 또한 스스로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사람의 모진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008년 당시 광우병 관련한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의 글에 달린 다음과 같은 댓글이 눈에 띄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5학년의 연륜의 관점에서는 그의 말이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

지금쯤 고인이 되신 어떤 목사님과 2010년경에 가졌던 사적인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도 한국 정치는 소란스러웠다. 정치에 대해 여러 말씀을 나누던 중 그 목사님은 갑자기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다. 일본 강점기에 나이를 속여 강제징집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면서 공부한 이야기, 전쟁이 끝나기 직전 부친의 지혜로 귀국하여 해방 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한 이야기.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목회자로서 지역 정치를 도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던 이야기. 이런 시절을 회상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에게 한국의 역사는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진보를 일구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당신의 평생을 돌아보던 짧은 순간에 그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진보를 뼈저리게 느꼈고, 사무치는 감사를 필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진보에 어떤 교회들은 크게 이바지하였고, 어떤 교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이유에서 ‘한국 교회’라는 단수적 표현은 부적절하다.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수적인 교회들이 모델로 삼는 미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여성들의 임신 관련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하였다. 여성의 임신과 관련한 진료 혜택에는 낙태 시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 혜택 장치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모권을 보호한다는 차원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10대에 결혼이 이루어져 임신하게 되는 경우 모태에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를 주장했다. 이런 충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대선 정국에서의 교회의 역할’에서 우리는 단수의 ‘교회’만을 말할 수 없으며, 복수의 ‘교회들’이 어떠한지를 말해야 하며, 또 그중에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교회들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정립하고, 그 정체성에 맞추어 어떤 정치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맞추어 자신의 정치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 교회가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가졌는지 드러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참여/비참여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기독교

최근 전세계적으로 시청률 대박을 알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게임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패러디로 해석되었다. “게임은 공정하게”라는 게임 주최측의 구호는 공정사회를 표명하는 듯하지만, 그 게임은 결국 남과 여, 체력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본래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에 불과했다. 물을 어긴 자나 게임에 진 자들에게는 곧바로 죽음이 주어지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패배자에게 특히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의 패배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사회적 절망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능력주의(meritocracy)로 무장한 한국의 자본주의적 공정사회의 패러디라는 말이다.

<오징어 게임> 등장인물 가운데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현실의 기독교인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244번은 자기 신앙에만 몰두할 뿐 이웃을 향한 윤리적 시각은 완전히 망각한 인물이다. 240번은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을 성폭행한 목사인 아버지를 칼로 죽인 여성이다. 결박당한 채 길바닥에 버려진 주인공의 안대를 벗겨주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는 사라지는 전도자도 나온다. 다음은 244번에 대한 기독교계 신문의 기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는 줄다리기와 유리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 등장하며 기독교 윤리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줄다리기 게임에서 상대방을 몰살시키고 극적으로 생존한 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 주변의 비난에 대해서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우린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자기변명을 늘어놓는다. (「교회 향한 독설은 현실 ... 선행 사명으로 극복」 한국기독교공보 2021년 10월 16일자 24면, 최은숙 기자의 기사.)

<오징어 게임>이 앞서 말한 패러디라면, 자칭 기독교인 244번의 말은 그저 일상적 삶에서 드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님, 오늘도 생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한 삶의 투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피 가운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희생과 피를 먹으며 살아남은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저는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현실의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은 244번의 기도, 혹은 이 시대의 모든 생존자의 기도일 것이다.

5. 주장

첫째, 정치와 관련된 한 한국교회는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질적인 복수의 교회들의 복합체이다. 마치 하나의 공통된 정치적 주장이 교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기만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를 프리즘으로 한 교회들의 분산의 인식이다. 시대적 인식과 정치적 감수성의 스펙트럼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신의 교회 혹은 신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런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여주는 수고가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정치참여를 제대로 논할 수 있으려면, 세속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교회 혹은 집단들의 그 영향력의 본질을 제대로 폭로해야 한다. 언론 권력, 금권의 동학 등을 낱알이 폭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영향력에서 한국의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 가운데 영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 낮을 가리며 그 영향력과 타협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교회 및 신학적 수사에서 권위주의 정치를 함의하는 언어를 변모시켜야 한다. 주인과 노예로 비유하는 신자의 신앙적 태도, 왕국 개념으로 형성된 기독교적 이상향, 통치, 다스림, 지배, 왕 등의 개념으로 자연스레 형성되는 수직적 위계 의식 등, 교회의 언어에 대한 정치적 반성을 통해 신앙인의 정치적 상상력에 썩어진 굴레를 벗어내야 한다.

넷째, 동성애 문제 등 정치화된 의제들을 구출해서 토론 가능한 의제로 변환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빨갱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했던 역할을 ‘다원주의자’ 혹은 ‘동성애 옹호자’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다. 낙인을 만들고 낙인을 찍어내는 힘을 가진 세력들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정치적 낙인을 위해 유통되는 주제들을 다시금 학문의 영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배덕만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 개신교: 그 역사와 성찰” 논란

장동민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1.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정치적 이념과 정치세력을 통하여서 가능하다. 가깝게 우리의 과거만 돌이켜보아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집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가장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이념을 선택하여 그들과 손을 잡았다. 구한말에는 개화파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주의와, 해방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연대하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념과 정파를 택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선거이므로 기독교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기독교 신앙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한 정치 집단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기독교적 가치는 정치 이념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는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초월적 가치를 지닌 기독교는 기존 정치 이념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실 정치가 기독교로부터 제공 받은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기성 정치로 제도화되면서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내부적 타락이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치이념을 상상해야 한다. 구시대 기득권에 안주하여 최악의 낙을 누릴 것이 아니라, 왜곡된 구조를 개혁함으로 그 구조 하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꿈을 꾸어야 한다. 기독교 복음은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과 변화를 향한 용기의 원동력이다. 배덕만은 한국교회가 특정 이념과 정당과 기독교를 동일시해 온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기비판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3. 자기비판의 맨 처음 단계는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 계시를 통하여 받을 수는 없는데, 이는 계시를 받는 사람 자신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옥성득)는 말과 같이 우리는 과거 역사를 반성적으로 회고함으로써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와 백성들이 왕조와 성전 몰락의 원인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반성의 70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다. 이 점에서 배덕만이 현재 기독교 몰락의 원인을 과거 기독교의 신앙행태와 편향된 정치적 선택에서 찾으려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4. 단지 역사를 돌이켜 보기만 하면 미래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자칫 한 쪽에 서서 (예컨대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 서서) 과거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아니면 역사적 상대주의에 빠져 회의와 패배감으로 끝날 수도 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하여서는 분명한 준거점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성경이 제공하는 절대적 가치들이다. 물론 그 절대적 가치들을 ‘해석’하는 주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기성찰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배덕만의 경우 그 준거점을 8명의 지식인의 제안으로 대체하였다. 그 제안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자신의 종파적 이익을 위하여 선거에 임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적절하고 합당한 조언들이지만 원론적이며 추상적인 제안에 그치고 있어, 좀 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5.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떨어진 왜곡된 역사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표적인 역사의 왜곡을 들자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비극과 일제 식민통치라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발생한 모순이다. 이 두 모순들의 배후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표현된 인간의 물질주의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 모순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악을 뽑어내는 심연이라 할 수 있다. 친일문제가 청산되지 못한 채 억압된 기억으로 남아 있고, 다시 전쟁 후유증과 뒤섞여 남북 국민의 집단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 무의식에 뿌리를 박고 자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양극화, 마중 갈등, 팬데믹, 기후변화, 젠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다. 누가 이 역사적 모순을 해결하고 왜곡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가? 누가 이 왜곡된 체제 아래 사는 민중들의 억압과 고통을 해결해 주려 노력하는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을 찾고 싶은데, 현실정치에서는 특혜 논란과 권력의 사유화 등이 논의의 주제이고, 기껏해야 실용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 능력이 부각된다. 과거의 모순을 망각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곧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무릇 거대담론을 싫어하는 자, 다른 이가 만든 거대담론의 말(馬)로 전락하고 만다.

6. 지난 오랜 세월 기독교는 스스로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인정받았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지정학적 모순이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할 때 반봉건·반외세라는 노선을 취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하고 가난한 민중들을 해방시켰다. 해방 후 반공주의와 산업화 이념을 내면화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 건설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더불어 교회의 성장을 맛보았고 높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친일청산에 실패하였고, 분단 체제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오들은 밀린 과제로 남겨졌고, 결국 그 미완의 과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 한국교회의 목을 움츠리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은 약육강식의 멘탈리티와 욕망을 내면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종교개혁 전야와 방불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 배덕만의 예상과 같이 한국 기독교는 “시대착오적 극우세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7.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스스로를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 번 역사의 전면에 서는 날이 올까? 앞서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의 기독교는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독교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가 가진 몇 가지 자산을 생각해보자.

첫째, 성경은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예언자들이 상상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다. 힘에 의하여 유지되는 팩스 로마나가 아닌 평등한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가진 자들의 정의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펼쳐지는 정의다. 정의와 평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싸움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넘치는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평화이고, 메마른 법적 정의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풍성한 정의다. 이기적 원자들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획일적 집단주의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둘째, 기독교는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³²⁾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상대적 가치만을 지닌다는 것을 안다. 기존 질서와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신학도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 모든 신앙고백서 안에는 그 신앙고백서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모든 비판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회개’ 혹은 ‘회심’은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인 ‘은혜’의 교리는 능력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부조리와 고통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세속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능력주의’로 귀결된다. 나의 능력으로 이만큼 성취하였으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다. 한 번 잡은 것은 놓으려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세습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긴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은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아니 반대해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은혜’이고 모든 기도에서 인간의 죄악과 무능을 고백한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은 모든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원동력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그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하는 작은 헌신을 인정하고 상 주는 이를 바라며, 이생에서 열매 맺지 못하여도 최후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뚜렷한 영향을 남길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 뽑힌다 해서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개인의 삶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뿐이다.

32)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와 이성의 승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8. 과연 위의 네 가지 자산을 풍성하게 소유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 길을 보여 준 교회사의 위인이 있는가?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손양원목사의 예를 들어보자. 손양원목사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한센병 환자)을 위하여 살았다. 소수파 중의 소수파요,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다. 그에게서 자본주의적 욕망은 찾아볼 수 없다. 손양원목사는 결코 자기만의 세계에, 혹은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힌 세대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신사참배 반대는 일제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종말을 예견한 것이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것은,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다. 그는 당시 좌우이념의 대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기독교는 좌우의 이념을 뛰어넘어야 하며,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념을 뛰어 넘는 것은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혐오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정도를 넘어 군국주의를 동반한 국수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여 태극기 배례를 반대하였다. 그는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해방 후 파렴치한 지도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자신과 아들들을 죽이는 총부리 앞에서도, 결국 은총이 승리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대선 정국과 한국의 교회들〉에 대한 토론문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이슈가 대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몇몇의 개혁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져버렸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까지 겹쳐 한국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말았다. 특히 집단 혹은 개인 사이의 갈등과 혐오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선이라는 정치의 순간에 이르러 이미 존재해온 갈등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상황이 이다지도 첨예해진 것의 이면에는 정치권력을 둘러싼 현 정권과 (범)야권 보수 세력 간의 갈등과 대결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가치와 이상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사회적 합의는 정치적 대결로 변질되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이 더 이상 가치나 이상에 대한 고민 보다는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권 혹은 개인의 자산 증가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한국사회는 더욱 경쟁적이며 배타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더불어 현 정세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한국 교회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어떤 맥락과 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문재인정부는 이념 중심의 한국 정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해보인다. 사실 이념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자원과 자본을 둘러싼 이권 싸움의 양상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안착한 것이 문재인정부 시기라고 평가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결집된 몇몇 사건을 해석해보면 사회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 젠더, 계층 등의 반목과 갈등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해 ‘조국 사건’으로 명명되는 586세대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메갈리아 논쟁’, ‘이대남’ 현상, ‘능력주의’, ‘공정과 정의’ 등이 서로 다른 현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

예컨대 젠더 갈등만 두고 살펴봐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변화된 젠더 위치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문화지체 현상이 불거져 왔었다. 현재에도 여성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취업률은 50% 내외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오랜 가부장제와 폭력적 문화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여성들의 불만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젊은 여성들

의 반발이 거세졌으며, 남성들은 변화한 젠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젠더 문화를 ‘똑똑한’ ‘페미니스트’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태를 보여주기도 한다(천관울&정한울, 2020).

하지만 계층, 젠더, 세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이 능력주의로 재해석되면서 사회 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사라진 채 능력 중심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계급 서열화가 ‘제도적 공정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채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쟁에서 이겨 성취한 것은 설혹 그것이 더 넓은 맥락에서 불평등에 기반을 둔 것일지라도 용인되고 정당화되고 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자녀를 향한 불공정한 개입이 단죄됨으로써 결국 그것이 아닌 ‘공정한 시험’과 ‘서열화’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담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최근 야당인 국민의 힘의 젊은 당대표의 연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이들의 삶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개인들은 ‘경쟁’에서 각자 살아남아야 하며, 살아남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특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논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도생.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사자성어이며 필자께서도 언급했던 <오징어게임>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화 콘테츠의 대세가 되어버린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승자 한명을 선별하기 위한 경쟁이 일상의 문화로 안착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던 대부분의 ‘촛불 시민’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성숙한 시민이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희망을 투영했던 정권이 공공성이나 사회적 재화를 확충하는데 실패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토록 경멸했던 부정부의에 어느 정도 결탁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크게 좌절했던 것이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발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이 복잡하게 얹혀 작동하면서 자본의 하락을 경험한 상당수의 촛불 시민들의 분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을 향해 있지만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고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향해온 사회적 가치는 쉽사리 잊히게 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이나 사회 윤리 감각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교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차례이다. 신학에 대한 이해가 낮은 토론자가 과연 한국 교회들의 상황까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낮은 곳에서 꾸준히 나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와 신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찰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부의 신학자와 연구자 그리고 신도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찰적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 교회가 경쟁에 내몰려 고통 받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충분한 울림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 교회가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발표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교회가 정치와 연관되어 작동하게 되면서 종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할이 간과되고 있으며,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충분히 알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기독교적 ‘정치’에 근접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 교회는 혐오적 발화를 쏟아내는데 앞장서기도 했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게다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안전이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일에 나서기까지 했다. 거기에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본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규범 체계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과거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입장이 명확했던 시기에는 기독교의 정치 참여 영역에서 교회 ‘들’ 사이의 영역이나 노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각각의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교회가 있다면 빈민운동에 헌신한 교회와 목회자들도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린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사회 내 소외 계층 등에 선한 영향력을 일정부분 펼쳐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교회의 이러한 역할은 상당부분 위축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의 갈등을 교회가 추동하거나 반대로 갈등 구조에 교회가 힘없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세가 긴급하게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윤리가 재조명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선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한국의 기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활발하게 토론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흥미롭게도 지난 십여 년간 기독교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변해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정치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서 이기도 하다. 과거 기독교 교회의 ‘정치’가 윤리와 가치 등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것에 반해 사회적 규범이 붕괴된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정치’활동이 특정한 목적(특히 자본이나 자원을 둘러싼)을 설파하기 위해 진행되면서 종교가 지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회가 특정 계층의 사회경제적 교류의 장이 되거나 이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는 일에 골몰하게 된 것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cf. 김진호, 2020).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시대적 인식과 정치적 감수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교회 확신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성찰하는 것, 교회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가부장적 문화 규범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정치 갈등의 이슈가 되어 버린 몇몇 첨예한 의제를 소통과 대화의 영역으로 구출하는 것 등이 요구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시도를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팬데믹과 첨예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람들은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출산을 최하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교는 삶의 의미를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일 수 있다. 그만큼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고, 해야만 하는 역할도 막중한 것이다. 만약 기독교에게 주어진 이러한 역할을 지금처럼 방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 세력의 약화 (신도수의 감소 및 교회의 양적 감소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정 능력의 위기와 사회적 연대의 해체 등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 급변기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교회나 공동체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굳건히 지킨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의 계절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환경문제나 생태계는 경제적 논리에 쉽사리 무력화되고, 평화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가짜’라고 호도되고 있다. 돈과 생존에 쫓기는 사람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한 사악한 이간질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근본을 지키며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영역이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권과 세력의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가치에 대한 토론에 교회가 나서주기를 기대해본다.